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에 關한 一論議

李 鍾 元*

< 目 次 >

- I. 序 頭
- II. 韓國經濟의 基本性格에 關한 諸 見解
- III. 經濟發展 分析方法論 試案
- IV. 解放以前 韓國經濟의 性格
- V. 解放以後 韓國經濟의 發展過程
- VI. 結 言

I. 序 頭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한국은 마침내 정치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곧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건국 초기의 역사적 혼란기에서도 농지개혁 등을 통한 자본주의 제도정비작업이 수행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주로 일제잔재 청산의 미흡과 남북분단에 따른 산업구조의 왜곡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말까지의 한국 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 채 외국원조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절대빈곤상태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건국초기의 혼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근대시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 196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하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실시에서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 노력은 이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후 약 30여년에 걸쳐 팔복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이른바 신흥공업 국가 대열에 서는 영예를 안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모순과 갈등이 최근들어 크게 인식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 자체가 급격히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견해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러한 논조에는 그간의 혼란했던 정치, 사회현상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재정치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리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오히려 경제외적 요인에서 찾거나 근대한국 역사의 전개과정과 결부시켜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본고는 우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경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우선 패배주의적 자세로 일관되어 온 한국의 과거사를 재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한 부정적 비난보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정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활로마련에 근거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다.

II. 韓國經濟의 基本性格에 관한 諸 見解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총체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분석 방법 및 견해 중 주목을 받아 온 몇가지 견해를 우선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규명에 관한 논쟁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이들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상 및 성격을 주요 경제발전이론 또는 경제발전단계론에 근거하여 규명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1. (半)殖民地・半封建社會論

이 용어는 원래 1930년대 중국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서 일본의 中西功, 大上末廣, 小谷汪之 와 梶村秀樹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지

배하에 있는 독자적 前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과거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시아 근대 식민지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함으로써 민족해방을 위한 변혁주체의 형성기반을 탐구하고 해방 이후 국가건설 방향을 전망하려는 현실적 욕구와 맞물려 학계에서 오랫동안 수용되어 왔다.¹⁾ 그런데 이러한 식반론은 사실 (반)식민지·반봉건사회를 과도기적 범주가 아니라 독자적 생산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즉 독자적 재생산 메카니즘을 갖는 사회구성체로 규정한 것이다.²⁾ 이 논리에 의하면 식민사회는 식민지 수탈강화→대립적 민족자본과 부농출현, 성장→식민사회 붕괴 과정을 따라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생 지주제하의 빈농, 즉 반프로레타리아트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투쟁이 식민구성체의 해체를 주도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히 일제지배의 후반기에는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의한 수탈로 국내 반봉건성이 감소하기는 커녕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소작료의 재강화, 소작조건 악화, 노동자 실질임금의 상대적 저하, 빈농의 증가 및 해외 이주자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과 반봉건성의 재강화라는 trade-off관계는 오히려 프랑크가 주창한 이른바 개발과 저개발의 양면성이라는 전형적인 주변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하의 식민사회란 주변자본주의와 분리되는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라기 보다는 주변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왔다. 즉, 식민사회는 자본주의의 주변부에 있어서의 특수한 표현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별개의 대체개념이라기 보다는 식민지에 이식된 자본주의 그 자체로 보는

1) 안병직(1985)

2) 여기서 (반)식민지성이란 상부구조에 대한 규정이며 반봉건성이란 경제적 토대에 대한 규정이다. 물론 상부구조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의미하며 반봉건적 경제토대란 식민지 지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자본주의제도의 이식에도 불구하고 반봉건적 지주제가 우위를 점하는 식민지 사회에 관한 발전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근대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에서는 正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식민지사회를 반봉건적 식민지지주제의 성격이 강한 사회로 규정하면서도 일단은 자본주의제도가 정착된 사회로 규정하는 논리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론이라 한다. 이 두가지 논리는 모두 COMINTERN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한때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론이 강조된 시기도 있으나 최근에는 식반론이 역시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국근대사회성격과 시대구분논쟁에 관한 내용은 이병천(1988)을 참고하기 바란다.

것이 적당하고 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비단 이 논리에 근거한 발전과정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독점자본국가에의 예측성만을 강조하는 종속이론과는 달리 경제발전과정을 변혁주체를 중심으로 조명하는 시각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과 특히 해방당시 광복의 의미와 이후 변혁의 주체를 규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周邊資本主義論

1970년대 말부터 신종속이론 특히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을 활용하는 3각구조론에 근거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규명코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³⁾

즉, 식민시대의 상황을 미국은 중심부(core), 일본은 반주변부(semi-periphery) 그리고 조선은 주변부(periphery)로 파악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식민지 공업화의 발전은 식민지. 반봉건성을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데 따라서 식민지 조선은 이중적 종속하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혹심한 저개발의 개발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8·15 광복이란 세계체제상 반주변부인 일본에 대한 주변부 종속관계가 단절됨과 동시에 중추자본주의에로의 직접적 종속관계성립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중적 종속의 굴레인 반봉건적 생산양식이 일단 극복되는데 이는 외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의 요구와 내적으로는 한국민중의 요구가 일치됨으로써 정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후 남북분단과 함께 동서 냉전의 희생양이 되면서 미·일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지역전략의 일환으로서 (종속적) 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의 변화는 내적 요구보다는 외적 요구가 오히려 우위를 점하며 결국 광복후의 국가형성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상부구조에 의해 하부구조가 축조되는 유형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컨대 농지개혁이나 귀속재산 불하 및 원조물자 배분과정을 그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자본론적 논의는 중심-주변간의 모순만에 집착하고 내적모순을 경시함으로써 주변부의 저개발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한다는

3) 이대근(1985)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國家 獨占資本主義論

한국자본주의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유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체질로 규정하거나 해방 이후 한국경제를 일제라는 반주변부 대신 미국이라는 중심부 경제권에 종속된 형태로 보는 시각과는 달리 한국경제는 이미 일제하에서 비자발적이거나 자본주의체제로 성립되었고 해방후에는 제도개편에 따라 관료주의와 국가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1960년대 이후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과란을 일으킨 바 있다.⁴⁾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란 후기자본주의에 있어 공급능력과잉이 야기한 위기에 직면한 독점자본과 국가의 결합에 의한 위기관리체제적 성격을 갖는데 반해 해방초기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제도가 제대로 정비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본부족에 따른 과소생산위기를 국가개입으로 극복하려 시도한 시기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가 산업자본의 축적기를 거쳐 독점이 형성되고 그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나아가 국가개입이 제도화된 것과는 달리 한국자본주의는 먼저 상부구조가 형성되고 그 상부구조에 의해 하부구조가 구축됨으로 애당초 국가와 자본가를 분리하거나 또 양자가 유착되어 가는 형태로 파악하는 방식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 점은 이른바 「제국주의」란 개념과의 연관성이다. 즉, Lenin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으로부터 진화·발전되면서 성립되는 최고단계의 자본주의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진화과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된다. 한편 Rosa Luxemburg는 자본주의 국가는 이윤취득자와 임금노동자간의 소득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이 소비재 과잉생산 현상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비자본주의적 국가를 군사적 행동에 의해 외적시장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를 제국주의의 본질이라 하였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국가자본주의를 제국주의개념과 연관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려 할 경우 한국경제를 국가독점자본

4) 박현채(1985)

주의로 이해하려는 주장의 설득력은 더 한층 상실되고 말것이라 믿어진다.⁵⁾ 사실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한 비자본주의적 식민지시장의 재분할전쟁이 끝난 후 前資本主義的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함에 따라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개념에 상응하는 국가는 소멸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내부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상승하였고 Keynes이론의 도입으로 복지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격렬한 계급투쟁이나 심각한 공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공할만한 기술진보는 소비재의 과잉생산보다는 오히려 생산수단의 과잉생산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를 처음에는 무상원조에 의해 그리고 나중에는 차관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수출로 해소하려 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재를 도입한 개도국들이 이를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자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적인 국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比較史學 論理에 根據한 見解

앞서 소개한 3가지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 관한 Marx 이론이나 Neo-marxism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Marx적 논리를 수용하되 Weber의 논리와 접목시켜 자본주의의 성립 및 이행과정을 설명하는 부류의 논리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大塚의 비교사학을 들수 있다. 오오츠카(大塚)의 비교사학이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장 먼저 전형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유럽 諸國(특히 영국)에서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행상의 경제적 법칙을 규명하고 그것의 객관적 가능성을 구성하는 역사적 제조건을 理想型(ideal typus)으로 구성하여 비교사적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비교의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사에 대한 분석시각을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오오츠카는 자본주의 발달사의 중심과제를 산업자본의 역사적 형성과정의 추구라고 보았으며 임노동관계(노동력의 상품화가 요건)라는 생산관계와 자

5) 이러한 관점에서 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임원택(1987)과 최단옥(1991)의 것이 있다.

6) 박현채(편역) (1981)

본가가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협업하는 사회적 생산력을 산업 자본의 기초규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자본의 역사적 계보는 前期的 資本(商業資本)의 쇠퇴를 제치고 그것에 대항해서 생산과정 전체에 발판을 가지며 새로이 발흥한 半農半工의 이른바 中產的 生産者層에서 찾았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그는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라는 발전단계를 첫째로는 경제적 생산양식의 발전단계, 그리고 둘째로는 경제적 사회구성의 역사적 계기 즉, 사회구성의 발전단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현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이행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결과를 뜻한다고 보았다.

“일정한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구성의 내부에서 전혀 새로운 다른 종류의 생산양식이 발생하여 낡은 생산양식을 붕괴시키며 발달하고 드디어는 지난날의 사회구성을 해체시켜 스스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새로운 사회구성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오오츠카의 논의는 일단 Marx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Weber의 논리를 가미하여 이행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분석시각을 정립한 것이며 따라서 그는 Marx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자생적인 이행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그는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성립의 물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생산력적 기초 즉, 생산력의 사회화와 그 방향으로의 체제변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데 불과하다 보았다.

여하튼 오오츠카의 방법론에 따르면 결국 자본주의의 성립이란 봉건제의 해체에서 형성되는 중산적 생산자층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의 양극 분해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산업자본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렇게 성립된 산업자본에 의해 「매뉴팩처어」 단계를 거쳐 공장제 공업으로 이행하며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오오츠카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한국경제 전개과정의 특징을 규명한 대표적 견해로서 최단옥(1988)을 들 수 있다.⁷⁾ 최단옥(1989)은 우선 자

7) 최단옥(1988, 1991)

본주의의 맹아를 찾는 작업, 특히 노동자의 생산도구로부터의 분리를 기점으로 하는 원시적 축적을 담당하는 집단의 출현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성립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판정코자 하였다. 만일 자생적이지 아니거나 자생적이라도 상기 조건에 미흡할 경우 그 사회를 왜곡된 자본주의 또는 미성숙된 자본주의 내지 전기적 자본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어떤 경로로든 자본주의가 정착된 경우, 이후의 이행과정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폐해가 점증하는 정도에 따라 이행과정상의 단계를 규명하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일단 일제시대에 굳어진 반봉건적 생산관계 탈피를 위한 제1차적 축적과정이라 규정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과 적산불하 및 원조정책은 봉건적 지배계층과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불철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또다시 왜곡과 파행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된 견해이다. 최단옥은 이러한 내부적 모순의 축적이 4·19시민혁명으로 표출되었으며 5. 16정변에 의해 시련을 겪기는 했으나 대세는 그대로 진행되어 곧 산업혁명으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산업혁명의 후기를 경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역사의 보편적 발전 내지 진보에 관한 법칙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사회집단의 출현 내지 존재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특히 후발자본주의 경제의 성립 및 전개과정이 갖는 보다 중요한 측면이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Ⅲ. 經濟發展 分析方法論 試案

우리는 흔히 인류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한다. 과연 이 때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류 복지수준의 향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지란 기본적으로 인권의 신장과

8) 최단옥(1991)은 시민혁명을 새로운 생산자층이 구래의 봉건계층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규정하였고 이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써 공장제공업에 근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재생산구조의 기본적인 틀로 자리잡는 산업혁명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방식의 논리를 설정하였다.

(물질적)생활수준의 향상을 뜻한다. 물론 근대에 이르러 복지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어 신분적 자유는 물론 민주적 정치참여, 최저생활보장 및 경제·사회적 형평 제고 등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의 발전이란 역시 인류의 복지향상이란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사적 분석 시각은 단순히 경제여건 및 제도의 변화내용에 집중되어 온 감이 있다. 물론 Marx의 유물사관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분석의 토대로 하는 인간해방사관을 정립하여 제시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이 지나쳐 필연적 이행과정을 강조하는 단선적 논리에 집착하였을 뿐 아니라 투쟁에 의한 이행의 능동적 실천을 주창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말았다.

본고에서 제시코자 하는 경제발전에 관한 분석방법론은 경제발전단계설의 기본논리와, Weber류의 분석방법론을 접목시켜 정립한 다음과 같은 명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첫째, 경제의 발전과정을 단순한 경제여건이나 제도의 변화내용으로 파악하는 대신 인류의 복지수준 변화내용을 근거로 평가한다.

둘째, 경제여건이나 제도 및 관습에 따라 이행되는 발전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단선적인 이행과정에 의해 모든 지역이나 사회집단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그러나 인류복지개선에 보다 성공적인 특정 경제체제 및 제도가 정립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여타 지역에 파급되어 변화 압력을 미친다.

넷째,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출현하여 외부적 변화 압력으로 작용해도 여건에 따라 여타 지역에서는 수용되지 못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특정 발전단계는 거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물론 이때 주도적 체제가 정착하지 못한 지역의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정체적 성격을 띠게 된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는 기존제도의 정착이 불철저하거나 체제내의 지배계층의 기반이 부실한 곳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경제변혁의 요체는 주도적 지배계층의 변화와 지배방식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가 정치, 사회, 종교 및 사상은 물론 경제제도 및 정책내용과의 연관속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논리는 인류역사 발전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가능한 기초규정

으로 제시된 것이며 상이한 시대와 지역에서의 경제발전과정이 각 사회구성체가 갖는 객관적 가능성 내지 적합한 연관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순서로 실현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의 설정을 가능케하는 역사발전과정의 핵심적인 동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생산도구 및 생산요소의 소유내용과 이에 근거한 지배방식과 생산양식이 갖는 경제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원시시대란 모든 생산도구와 물질을 공동소유하고 공동생산 또는 공동분배하는 시기라 한다. 그러나 생산도구 및 생산방법의 개선은 유목, 목축 및 농경사회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인류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원시사회보다 향상된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그간 평등관계에 있었던 원시시대적 사회구성체를 파괴하면서 성립된 것이다. 즉,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무한한 욕망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로 인해 복지는 개선되었으나 이는 완력 및 무력과 같은 능력의 차이에 근거한 정복전쟁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인간간의 불평등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배의 주체 및 지배방식의 변화에 따라 인류복지개선 특히 인권의 신장이 성취되어 온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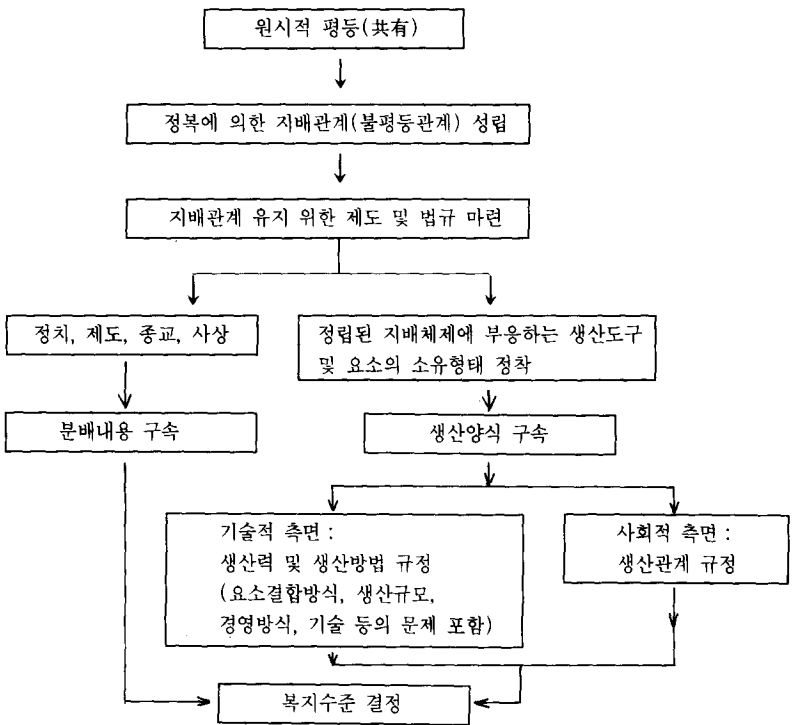
일단 정복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에 의해 지배계층이 형성되면 이들은 생산도구 및 요소의 소유와 이에 근거한 경제력 장악과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관계의 제도화를 정착시킨다. 그리고 지배관계의 성공적 유지는 주로 생산력에 근거하는 경제력에 의존하며 부의 분배상태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진다. 이때 생산력의 기초는 전통적으로 생산요소의 소유방식과 이에 따른 경영방식에 의존하게 되며 만일 기존의 지배체제 및 지배계층에 의한 생산력이 주도권을 상실한 채 성공적인 확대재생산을 실현하지 못할 때 지배체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지배체제 이행은 근대에 이르러 생산요소 소유형태 자체보다는 생산관계유형과 정치·사회·종교 및 사상의 영향은 물론 경제제도 및 정책내용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달라질 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형식적 자유가 보장된 이후에도 지속되

고 있다. 단, 효율적인 생산력의 신장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권과 인류복지, 즉 정치사회적 자유의 신장과 경제적 윤택 및 형평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내용을 도표형식으로 정리해 본 것이 도표 1이다.⁹⁾

〈도표 1〉 경제발전에 관한 분석방법론 도표



9)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생산양식, 생산력과 생산관계 등은 전통적인 Marx경제이론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여기서는 Marx이론의 전통적 개념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생산력이라 함은 생산요소 결합방식과 생산규모 그리고 경영방식 및 기술등에 의존하는 생산성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관계 또한 단순한 노사간의 대립적 계급관계가 아니라 노조유형과 자본소유방식에 따른 생산 및 경영형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대시민 사회의 특징적 계층인 관료조직의 구조와 권력분산정도에 따르는 경제주체간의 역학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생산양식 또한 단순한 생산방식은 물론 경제체제에 이르는 실로 광범위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본고에서는 Marx적 용어인 「생산수단」 대신에 보다 일반적인 「생산요소」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기술 및 자원까지를 포괄하는 통상적인 근대경제학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립한 논리를 모든 지역의 발전단계에 모두 적용하여 그 객관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그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본고의 주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여기서는 단지 주관심이 되는 사안만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西洋의 經濟發展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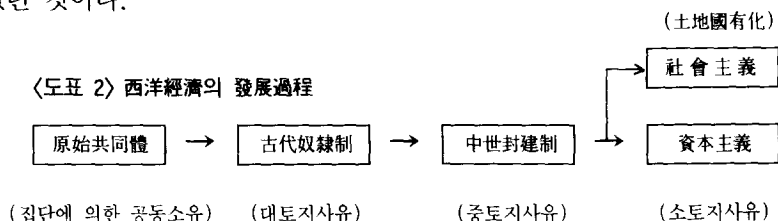
우선 서양의 고전고대사회는 정복전쟁을 통해 지배체계가 성립된 대표적 사회구성체로서 피지배계층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 및 도구의 소유권이 지배계층에 귀속된 이른바 “노예제”사회였다. 그런데 이 고대 노예제하에서의 지배계층은 소비주체로서만 존재하였고 생산(및 교역)은 주로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은 지속적인 정복전쟁 내지 식민지 유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생산규모나 방법등이 불안정하였고 생산력은 정체내지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생산의 주체인 노예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신장되는 형태의 봉건제로의 이행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노예제사회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라기 보다는 상업이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경우 곡물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였고 주로 정복지로부터 조달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나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지속되면 정복지에서의 착취나 정상적 상업활동이 유지되기 곤란한 산업구조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농업은 기본적으로 대토지소유 지배자가 노예를 시켜 생산을 담당하게 하는 유형이 지배적이었으나 대외 교역규모에 비해 국내생산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던 농업생산 정체기적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비록 고대시기가 오래 존속은 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무력에 의한 정복능력이 유지 가능했던 체제 및 제도에 연유하는 것일 뿐이고 생산이 아닌 사치소비재 소비의 주역(그나마 물품조달은 정복민 내지 이주민이 주역을 담당했던 대외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했음)에 불과했던 지배계층은 지속적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경제력 확충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증폭되어 체제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자 지배계층은 결국 大土地制의 골격인 라티퐁다움을 분할하여 봉

건소작제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를 중심으로 보면 결국 서구에서는 공동소유시기였던 원시사회가 정복전쟁에 의해 성립된 고대사회로 대체되면서 비로소 사유화가 정착되는데 이 시기에는 大土地私有制가 주축이 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고대 노예제가 무너지고 중세 봉건제가 들어서면서 정착된 토지제도는 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주의 中土地私有制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독립자영농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小土地私有化가 이루어지고 이들 계층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른바 중산적 생산자층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이행과정상의 특징은 결국 역사발전 과정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에 의해 토지가 사유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의 복지(신분적 자유와 생활수준 등)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한 본고의 기본 명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흐름에 역행하는 이행과정이 바로 Marx이론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던 사회주의제도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제도로의 이행은 자생적 성격보다는 폭력을 동반한 능동적인 성취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련의 볼셰비키혁명이 전기가 되었다고 하나 이는 근대적 시민혁명의 성격보다는 쿠데타 성격이 강한 상층에서의 권력이동이라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성립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는 무력에 의해 인접 동구국가로 이식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명제에 따르면 인류역사발전의 흐름에 역행했던 역사적 실험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당초부터 안고 있었으니 토지국유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주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부정되는 이상 각 개인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될 수 없으며 결국은 토지소유가 귀속된 지배체제 내의 관료에게 예측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확대 및 소유가능성이 배제된 상태하에서 생산성이 신장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며 결국은 자급자족마저 불가능한 침체속에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2. 東洋의 經濟發展過程

한편 이상과 같은 논리적 가설을 가지고 동양 및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동양의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패배주의적 사조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근대에 이르러 서양의 경제력이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즉, 동양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기본 목표는 대체적으로 왜 동양사회가 서양과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역동성이 결여된 정체사회에 머물렀는가를 규명하는데 두어졌다. 이러한 사조로 인해 특히 서양분석가들의 경우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Marx는 동양의 사회구성체를 서양의 고대노예제보다도 선행하는 겨우 원시상태를 벗어난 사회 정도로 규정한 바 있다. 아마 이러한 평가는 동양의 토지제도는 국유제로 일관되어 왔으며 사유화가 정착도 되어보지 못한 상태에 불과했다는 식의 논리를 보면 그럴듯 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Marx적 논리에 특유한 단선적 발전과정을 특히 생산수단(토지와 노동력 포함)의 소유형태와 이에 따른 생산관계만을 중시하는 논리 설정에 연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¹⁰⁾ 그러나 앞서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라 인류 역사 및 경제발전과정을 복지수준 향상에 맞추어 재조명할 경우 Marx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어떤 특정사회가 서구적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은 사회구성체로 이행한 흔적이 없다하여 아직도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제한된 기준만에 근거한 단선적 분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Weber는 동양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탄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식에 의해 동양의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해명코자 하였다. 이러한 Weber의 동양사회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주로 인용되어 온 종교사회학적 분석시각보다는 『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에서 제기된 지배의 유형론을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¹¹⁾

10) Marx적 경제사는(기술적 측면의) 생산력과(사회적 측면의) 생산관계로 대변되는 생산양식의 변모과정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문제로 귀속되며 이러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생산관계 즉 생산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11) 유석춘(1992)

즉, Weber는 동양사회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정치적 지배양식과 연관하여 설명하면서 동양사회 분석을 위해 핵심적인 이념형으로 농봉제와 가산관료제(patrimonialism)와 같은 지배유형을 규정한 바 있다. Weber의 가산관료제 개념은 Wittfogel의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개념과 더불어 동양적 정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대표적 이념형이다. 가산제적 지배란 행정의 합리화보다는 인습화를 초래하고 전통적 지배자 및 권위에 대한 헌신을 중심적인 에토스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자주적 역량이나 권한증대 노력은 질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한국은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정착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세력이나 집단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되는 관료엘리트 중심의 하향적 사회통제구조가 지배적이었다는 시각이 Weber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Weber가 규정한 합리화는 자세히 보면 탈주술화 및 가치의 다신교 명제를 포함하는 문화적 합리화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관료적 근대국가로 특징지워지는 사회적 합리화로 구분될 수 있다. Weber는 근대 유럽문화를 합리주의 문화로 규정하면서 이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Weber는 아울러 동양에서는 유교에 근거한 합리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상업적)영리를 시인하는 낙관적 현세 긍정사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편 퓨리타니즘은 현세에 대한 낙관적 긍정 대신 격렬한 현세거부(weltablenung)(현세의 가치를 낮게 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갈구함)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반영리적이고 금욕적인 윤리를 강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Weber는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를 퓨리타니즘의 에토스를 “내면적 품위의 윤리”로 그리고 유교의 에토스를 “외면적 품위의 윤리”로 규정지음으로써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적 윤리는 바로 士大夫(mandarin)라 불리우는 家產制官僚들이 중심적 담당자로서 주도해 왔으며 따라서 유교적 합리주의는 궁극적으로 전통주의 내지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양식의 무조건적 존속의 방향으로 향하는 말하자면 기존체제 유지지향적 논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¹²⁾

결국 Weber는 동양에서는 전통적 질서에 자신을 끊임없이 순응시켜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외면적 품위 유지

12) 조용범(1982)

를 존중하는 윤리가 탄생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유교적 윤리가 가산제 관료층으로 하여금 진보적인 변혁을 유도하지 못한 사유로서 전통주의를 뒷바침하고 있는 주술문화와의 단절이 실패한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유교의 낙관적인 현세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³⁾

물론 과연 이러한 Weber의 분석방법이 보편성을 가지며 또 동양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의 전통사회를 가산제적 지배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계속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¹⁴⁾

여하튼 이상과 같은 Marx나 Weber류의 분석시각은 국내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한국의 역사발전과정을 「동양적 전제국가」로 규정하여 정체성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사조와 「동양적 봉건국가」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동양에도 서양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봉건제적 특징이 강한 시기를 거쳐 이조후기에는 자본주의적 맹아현상이 나타났으며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시기적으로는 지연되었을 망정 자본주의는 자생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발전과정이 실재했다는 견해를 탄생시켰다. 특히 후자의 논리는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왔고 심지어는 이러한 논리를 확대시켜 토지국유제는 허상이었고 실제로는 서구보다 앞선 시기부터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사유화 논리는 박준서에 의해 명쾌하게 반박된 바 있듯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이라 보여진다.¹⁵⁾ 토지사유론자들이 제시하는 사유화에 대한 논증사례들은 박준서가 규정한 이른바 하급권(토지의 점유, 활용, 매매, 임대, 상속)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유)토지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상 토지국유에 근거하는 이른바 상급권이 한번도 배제된 적이 없는 이상 완전한 토지 사유는 한국의 경우 이조멸망시까지 존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 여기서 Weber가 제시한 합리성 개념은 탈주술성은 물론 계산가능성과 근대적 시민정신과 자본주의적 효율성에도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합리성이 곧 자본주의에 의한 급속한 생산력 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동인으로 제시되었고 새로운 제도 및 체제를 탄생시켜 새시대를 주도하는 힘(지배력)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았다.

14) 한편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양은 물론 서양에까지 적용가능한 전제나 분석방법이 제시된 것중 이른바 「小經營論」이라는 분석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並作制에 대한 연구 그리고 佃戶層의 분해문제등이 이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분석되고 있다.

15) 박준서(1982)

3. 韓國의 經濟發展過程

그러면 지금부터 서양의 발전단계와는 상이한 이행과정을 경험한 한국의 경제발전 내용을 역시 앞서 제시한 명제에 근거하여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도 원시시대는 정복전쟁에 의해 마감되고 정복자에 의한 지배체제가 정립되었던 것은 서양과 같다. 그런데 초기 지배체제는 강력한 전제국가가 아닌 지배적 부족의 연합체 성격을 갖는 부족국가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성체하에서의 피정복자는 서양고대 노예제처럼 피정복자가 개인에게 예속되는 유형이 아니라 지배적인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총체적 노예제」 또는 「국가적 노예제」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하의 노예는 어느 한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서양고대노예제와는 달리 지배부족에 집단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의 개인적 노예제보다는 인권과 복지수준이 개선된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의 생산주체는 전통적인 노예라기 보다는 일반 양민으로 표현되곤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의해 농업위주의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정착, 유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양적 전제국가가 탄생하기 이전 상태가 이미 서양의 고대사회보다 인류복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발전된 유형의 사회구성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Marx적 개념인 아시아적 공동체 이념이 갖는 허구성이 지적될 수 있다.

지배적 부족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는 동양적 고대국가는 통일신라시기를 전후하여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¹⁶⁾ 즉, 골품제와 같은 지배씨족이나 부족위주의 집단지배체제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전제국가가 탄생된다. 신라의 경우에는 讀書出身科(이 제도는 고려이후에는 科擧制로 변화됨)와 화랑제도를 이용하여 관료를 등용함으로써 골품제를 유명무실화하였고 특히 외래종교였던 불교를 정착시키며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시기에 이르러 일반양민들은 지배부족 단위에 집단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생산하던 방식에서 떠나게 된다. 즉,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로 귀속된 국유토지를 국가가 丁田制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분급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丁田制는 丁年(20세)에 달한 청년부터 60세에

16) 이러한 방식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박준서(1982)를 참조할 것

이르기까지 장년층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토지를 분여하여 자율적으로 농사를 짓되 대신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해 祖·庸·調를 부과했던 제도이다(이 제도는 고려 때는 전시과로 그리고 이조 초기에는 科田制와 職田制로 전환해 갔으나 기본성격은 동일함).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일반 백성의 자율성과 복지는 한층 더 향상되는 전기를 맞게 되고 이러한 특징이 서양의 중세시대에 존재한 농노제하의 농노적 성격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 동양적 농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당시의 백성을 「국가적 농노」라 칭하기도 한다.¹⁷⁾

이와같은 국가적 농노제 시기는 중앙집권적 왕권이 성공적인 관료체제의 활용을 통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관료제도의 정착 내지 강화로 이들의 영향력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쿠데타로 성립된 조선조의 경우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권의 계승 및 유지를 위해 외척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전제국가적 지배력 및 왕권은 점차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여하튼 이러한 관료들의 권력강화 내지 유지는 과거제라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세습적 독점권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등에 의한 토지의 분할사유 내지 대토지소유화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들 계층을 통한 원시적 자본축적이란 거의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렀다. 그리고 당시의 주산업은 안정적인 농업이었으며 해외교역이나 상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이 분야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의 축적 또한 미미했다. 그러나 이들 관료계층의 영향력은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크게 신장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관료적 지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소작제(병작제¹⁸⁾의 정착)가 정립되기에 이른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되어 궁정수공업등이 쇠퇴하는 반면 대외교역과 독립자영수공업이 크게 신장되어 賃金私工이 출현하는가 하면 분업노동

17) 소경영론자들은 국가노예제를 토지점유노예제(소경영일 뿐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하여 설정한 개념임)로 파악하고 이들 소경영자들의 잉여생산물 축적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관계가 강화되고 실질적 소유성격이 강해지면서 국가적 농노화시대를 열었다고 하나 아직 정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18) 병작제 또는 타작제란 종자와 지세는 지주가 부담되 수확의 반을 수취하는 정액지대 제도를 말하며 도지제란 수확의 1/3-1/4을 부담하는 정액지대제도로 종자와 지세를 소작인이 부담하던 소작제를 일컫는다.

과 工匠組合이 결성되는 예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도자기 유기 및 제조업의 경우는 先貸制의 공업형태의 제조업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금속화폐 통용이 점차 일반화되었고 亂慶權을 가진 六矣慶과 보부상, 좌상 및 객주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鄕市가 크게 발달되었으며 특히 객주는 여인숙과 음식점을 위주로 물품의 보관, 운송 그리고 위탁판매와 금융업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전기적 자본의 대표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농민적 지주의 등장을 가능케하였고 관료적 지주와 더불어 소작제를 정착시키게 됨에 따라 하급권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부분적인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만연하였다. 그리고 점차 전통적 신분제도는 와해하기 시작하여 심지어는 몰락 양반이 농민지주로 부터 소작을 부치는 일까지 속출하게 되었다.¹⁹⁾ 급기야는 1894년에 근대적 시민혁명의 성격을 갖는 동학혁명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²⁰⁾ 이와같은 조선후기의 경제특성을 규명하는데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못하나 현재까지 연구결과 및 사료로는 위에서 밝힌 자본주의적 망아현상이 아주 활발하여 국민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만한 비중을 가질 만큼 성숙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동학혁명이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함이 없이 전개될 수 있었다면 이후 전개되었을 상황은 실제와 사뭇 달랐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동학혁명은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기존 사회구성

19) 병작제는 15C-16C경부터 성립된 소작제의 한 유형으로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봉건적 생산양식하의 영주와 농민간의 성격과 대비되곤 한다. 그러나 관료적 지주는 어디까지나 토지국유제하에 존립하는 하급권의 소유자일 뿐이었고 따라서 전호 또한 지주의 사적 예측농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바 서양 중세적 봉건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초기의 동양적 봉건제와는 달리 병작제는 관료의 권한이 크게 증대된 유형의 소작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17C-18C이후에는 흉작, 전쟁, 과다부역들에 따라 자영하던 토지를 매매하거나 저당잡힘에 따라 지주경영하의 소작인 즉 전호로 흡수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작제도가 지배적 유형이 되는 시기를 맞는다. 그리고 지주나 상인들의 자본가적 경영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상인들의 토지매점과 병작제 경영진출 사례(농민지주화)가 많아졌다. 이어서 상품경제 발전 및 생산력 발전(사회적 분업, 전문화)과 더불어 전호경영 내부에서 우발적이 아닌 항상적인 상품생산의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전호층의 양극분해현상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상층농민의 망아적 이윤은 전기적 자본의 독점력 때문에 확대재생산이 저해되었고 한편 공업부문의 발달 또한 미흡하여 몰락농민은 임노동자로 흡수할 여력이 없어 전호층의 근대적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호층 분해는 15C-16C에 존재한 자작농 → 전호 → 유민 → 전호 → 자작농 → 전호 식의 순환에 머물른 봉건적 분해과정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었음은 확실하다.

20) 최단옥(1991)은 시민혁명을 중산적 생산자층이 성장하여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산업자본으로 전회되는 시기의 사회주도세력의 역전과정으로 정의하였고 따라서 동학혁명을 시민혁명단계에는 못 미치는 농민항쟁으로 규정함.

체의 변화의 필요성이 날로 크게 인식되고 있던 시기에 서학과는 달리 전통적인 종교 및 사상에 근거하여 추진된 개혁운동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나 이들이 기존의 동양적 봉건체제 유지를 기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음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한국경제의 이행과정은 원시시대 → 총체적 국가노예제 → 국가적 농노제 → 지주제 유형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일반국민의 복지는 향상되는 발전을 성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명실상부한 토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요소의 사유화 현상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시대변천에 따라 일반 자영농민층의 독립적 경영도나 신분적 위상이 계속 신장되어 왔으며 특히 조선후기에 등장한 지주제하에서는 하급권에 한정된 것이나마 토지의 매매, 상속, 임대 등이 가능한 시대로 돌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解放以前 韓國經濟의 性格

이상에서 제시된 경제발전에 관한 분석방법론에 의거하여 근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해방이전시기와 이후시기로 구분하여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1. 資本主義 萌芽期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크게는 동양적 봉건제 또는 국가적 농노제 시대로 구분되는 시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시기(통일신라, 고려, 조선전기)와는 그 성격이 변질되는 시기가 바로 이조후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통하여 국토와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 또는 납치당하는가 하면 수많은 재산이 소실내지는 강탈당하는 수난을 체험한 연후에 형성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연유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왕실과 관료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 따라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외척을 중심으로 하는 세도정치가 등장하였다. 황폐화된 국토와 경작지 회복정책(예컨대 개간자에게는 하급권에 해당하는 소유권 부여)이 아니라 해도 실추된 조정의 영향력 축소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주들에게 많이 이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신라의 丁田制와 고려의 田柴

科 그리고 이조 초기의 科田制에 뒤이어 실시했던 職田制는 폐기되고 말았고 三政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체계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관료 및 양반계층에 토지와 더불어 예속된 형태로 영세소작경영을 영위하던 조선의 전통적 농업생산관계에 드디어 경영농이 등장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농의 주체는 아직도 지주계층이었으며 이들은 몰락농민을 모집하여 年貢雇農을 삼는 경영주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이 시기에 농민들이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借地農(서양의 독립자영농민층과 유사)으로서 半作半收를 조건으로 경영을 전담하는 이른바 竝作制가 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경영형태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상공업이 전례없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그 담당자들은 봉건적 질서에 안주하였을 뿐 자신들의 지위상승을 기도하거나 쟁취하지 못하였고 숙종 이후 화폐경제가 뿌리를 내렸으나 조세의 금납화는 지극히 제한(산간벽지에만 허용)적이었으며 소작료 또한 100% 物納만 허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이조후기에 이르러서도 봉건국가의 토지국유제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중앙정부 및 왕권의 상대적 저하에 따라 토지의 하급권이 지주계층(관료적 지주가 대종을 이루었지만 농민적 지주도 점증하는 추세에 있었음)에 상당히 이양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결국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예측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신분적 자유 또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경영농의 주체가 지주인 이상 농민들의 원시축적은 불가능하였고 봉건적 질서에 안주한 상공인 또한 자본축적에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과 계층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는 일정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서구제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며 급속한 개화기를 맞게된다. 수구파와 개화파의 첨예한 대립을 거쳐 결국은 수구파에 의한 개혁이 추진되는데 「東道西器」 즉,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며 서양 문물과 기술을 수용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정

21)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1860년 양무파에 의해 근대화(中體西用)를 추진한 淸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으로 아편전쟁등 침략전쟁에 휘말리나 열강간의 경쟁으로 식민지화는 모면하였다.

한편 1854년 미일 수호조약으로 개국한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으로(구봉건지도층이 주도했지만) 혁명적 개혁(和魂洋才)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개혁은 이 시기에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던 미국이나 후발국의 추격으로 산업재편이 절실했던 영국이 국내문제에 눈을 돌림에 따라 침략할 겨를이 없는 사이에 아무런 제약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행운을 가졌다.

책은 재정난과 열강의 내정 간섭 및 국제정세불안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외국자본에 대항하던 상인들의 노력으로 자리잡던 민족자본과 회사는 노일전쟁 이후 거의 몰락하고 말았고 이후 일본에 의한 화폐개혁 및 금융 지배로 한국의 민족자본 형성이나 자생적 발전의 길은 단절되고 말았다.²²⁾

한편 개항이후 서구문물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국정은 극도로 문란해졌고 성숙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은 결국 동학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이 역시 외세에 의해 진압되는 비운을 맞았고 따라서 자생적인 시민혁명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2. 殖民地 資本主義 移植期

갑오년의 동학혁명은 자생적인 근대화로 연결되지 못한 채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한 일제에 의해 진압되었고 결국은 이조의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긴 세월을 걸쳐 존립해 온 봉건적 전제국가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일제는 근대적 화폐제도 및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철도,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전력등의 기간산업을 확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근대자본주의적 제도를 이식하여 정착시켰다. 아울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국유제에 기초한 봉건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소유개념을 정착시켰다.²³⁾ 이상과 같은 조치에 의해 일단 우리나라는 이른바 식민지적 자본주의로 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통상적으로 이식형 식민자본주의가 갖는 기본적 특징, 즉 근대화가 곧

22) 예컨대 이미 1894년에 동학혁명을 진압한 일본은 동년에 신식화폐법을 정하여 은본위제를 창설함으로써 화폐금융부분에 외국의 금융조직이 발붙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3)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소작제를 고착시켜 봉건적 관행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예컨대 조선 후기에는 세습이 가능했던 소작권이 일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언제든 소작인을 내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작인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감수해야 했었다. 최단옥(1991)은 일본이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하기위해 한국경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이식원칙과 민족적 산업자본 성장역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봉건적 공납이나 농노적 경영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를 끊어내리고 자본제적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여 농민을 일단 토지로 부터 분리시키고 사회 내의 자본의 지배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토지자산과 노동력을 직접 수탈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까지 重層的 所有를 내용으로 하고 있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깨고 근대적 소유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실제의 경작자인 농민이 아니라 종래의 관료적 지주를 중심으로 소유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며 1917년(토지조사사업 말기)에 22.4%, 40.2%, 37.4%였던 자작, 자작겸 소작 및 소작농가의 구성비가 해방당시(남한)에는 오히려 14.2%, 35.6%, 50.2%로 반전된 사실은 이러한 일제식민지 정책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식민지화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식민지 종속을 통해 상품경제로 편입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종속형식민지 국가들이 단순히 제국주의의 원료공급처 및 제국주의 제조업상품의 판매시장으로서 기능하는 단순한 종속형 식민지 경제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예컨대 도로, 항만, 철도, 전신, 전화등은 바로 중국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 건설의 일환으로, 철광 및 석탄등의 1차 산업은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조달이란 차원에서 개발되었고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계획을 토대로 생산된 미곡은 1931년 만주사변이후 供出米의 형식으로 대부분 수탈되는 일종의 병참기지형 경제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²⁴⁾

우선 합방초기의 상황을 보다 세밀히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日帝의 정책 목표와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교전국들의 해외시장이 無主空山으로 일본에 열려짐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일본은 산업생산에 주력하며 이에 소요되는 원료와 식량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내의 근대공업발달은 억제하면서 공업원료만의 공급처로 활용하기 위한 조선회사령을 공포하였고 동시에 식량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토지조사령의 발표 및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지배계층이었던 지주들에게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수여하는 토지개혁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외형상 근대적 토지소유제가 도입된 듯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지주와 농민과의 봉건적예속관계가 온존된 봉건적 소작제도와 현물소작료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합방 초기에는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공업건설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토지를 포함한 각종 생산도구 및 시설의 독점과 봉건적

24) 일본에서는 1886년 하급무사층이 德川막부를 폐하고 부국강병과 침략주의를 표방한 明治維新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천황제를 복고시켜 자신들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정벌을 성취하여 자신들의 지도적 역량을 과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조선을 점령하여 합병하였고 한반도를 중국침략을 위한 거점 및 병참기지로 삼게되었다.

25) 조기준(1983)과 최단옥(1991)에 의하면 이 법령은 상공회사 설립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한국인 소유의 산업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령으로 인해 「매뉴팩처어」단계에 와 있던 이 땅의 공업은 철저히 억제되고 몰락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분석하였다.

예속을 강요하는 경영 및 지배방식은 조선후기에 자생하던 근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통치의 안정기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3·1독립만세운동으로 합방초기의 통치방식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내부적으로 3·1운동에 의해 타격을 받아 식민지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던 일제가 1920년대에 이르러 외부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에 따라 전쟁특수라는 호재가 사라져 일본내의 공업은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불황에 처하는 시기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난국을 해소키 위해 일제는 일본내의 유휴자본을 조선에 진출시키게 되었고 이를 위해 1920년 4월 1일 한국내 공업건설의 억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게 된다.²⁶⁾ 동시에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 이외에 기능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에 대한 초등교육 및 실업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이를 문화정치라 일컬으며 3·1운동으로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는 일거양득의 계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계략은 단지 일본의 목표달성에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일제의 변신은 3·1운동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적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기를 맞아 암흑기를 벗어난 민족자본들이 근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 당시 근대산업으로 진출한 민족자본은 미국의 대일 수출에서 부를 축적한 대지주와 거상들(이들은 농업회사, 수산회사, 염직공업 등을 설립)과 전통적 상공업분야에 종사하며 연명해 온 영세상공업자들(기능공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분야 개척)이 주류를 이루었다.²⁷⁾ 이렇게 시작된 민족기업은 물산장려운동 등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농민과 근로자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여 노동운동은 물론 반제반봉건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 변화는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에서 시작한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 또다시 수난을 겪게 된다. 결국 전쟁수행을 위해 전국토를 병참기지화하는 한편 식량등을 수탈하기 위한 공출제 실시 그리고 노동력동원 및 징병제 실시를 통한 인권말살 심지어는 이러한 정책에 반항하는 세력의 근절을 위해 조선어사용금지, 創氏改名 등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야만적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일제하를

26) 조기준(1983)

27) 조기준(1983)

거치며 한국의 경제는 봉건적 잔재가 오히려 강화되는 식민지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 말기에 민족자본은 전쟁수행을 위해 대거 한국에 진입한 일본독점자본에 예속된 상태로 일제에 영합하며 명맥을 유지하려 발버둥쳤으나 활용가치가 큰 대기업과 일부 중소자본만이 존속할 수 있었고 많은 중소자본이 몰락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탄압이 심할수록 이미 뿌리를 내린 한국인의 저항운동은 보다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물론 국내에서의 활동은 어려워 대부분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중일전쟁에 이르러서는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다. 이들의 힘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이들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V. 解放以後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1. 近代의 資本主義 構築期(1945-1960)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은 불행하게도 자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 종결의 부산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주도해 온 지도자들과 민족자본가들의 영향력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거나 오히려 견제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는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자연자원과 시장 그리고 식민경제가 남겨놓은 공업시설마저 분할되는 형국을 맞게되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그리고 분단된 상태에서나마 독립적 민족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지속되었는 바 국민경제 건설의 기초이념을 과거 역사에서 누적되어 온 봉건적 잔재와 식민지적 유산을 청산하고 그 바탕위에 국민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는데 두고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농가경제의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소작제도를 철폐, 경자유

28) 해방당시 석탄은 8:1 그리고 철광은 11:1의 비율로 주요광물이 북한에 편재된 상태에서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력의 경우는 북한이 총전력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공업생산의 경우에는 중공업은 8:2 비율로 북한에 편재되어 있었던 반면 경공업은 오히려 7:3비율로 남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분단으로 인한 산업구조상의 왜곡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전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의 단행, 그리고 개인의 창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를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기업원리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은 구시대적 지배계층의 저항이나 외세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불철저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었다.²⁹⁾ 일제말기를 거치며 몰락해버린 민족자본, 그나마 황폐해진 국토 및 산업시설의 분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근대적 소유관계나 생산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바 생산력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으며 자생적 발전기틀이 제대로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부족으로 인한 과소생산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중앙집권적 재정집행의 성격을 띠는 상부구조가 이미 이때부터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일단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었으나 일단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토지에 근거한 구시대적 지배체제의 교체 내지는 전환 시도

둘째, 고율 소작 및 신분적 보장이 없었던 체제를 붕괴시키고 안정적인 小農的 借地農 창설

세째, 「耕者有田」원칙에 따른 자작농 창설로 근대시민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건설의 기초를 세웠고 토지사유화를 일반화시킴으로서 생산의욕과 생산성 향상효과 도모

이상과 같은 근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이 해장초기에는 제반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특히 자생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산업자본가 계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에 의해 제공된 원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 규모나 성격면에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예컨대 1953-1961년 간의 해외원조규모는 연평균 총투자율의 약 64%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다(동기간중 총투자율은 연평균 12.4%였는데 국내저축률은 4.1%정도였고 원조의 형태로 유입된 해외저축률이 연평균 8.0%에 달했었다).³⁰⁾ 그리고 미국원조가 국내경제에 미친 주요한 기여내용중 하나로 지적

29) 1957년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49년 6월 21일 당시 대상지의 66.1%(일반농지의 44.6%, 귀속농지의 86.8%)에 불과한 실적(1945. 12에 대비하면 38.1%에 불과)을 올리는데 그침

30) 홍성유(1964)

할 수 있는 것은 1946년-53년간 연평균 약 120%에 달하는 고율의 인플레이를 1954년-61년간에는 연평균 20%이내로 안정시켰고 따라서 전기의 GNP성장을 3.5%를 훨씬 상회하는 4.7%의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³¹⁾

물론 소비재위주의 원조가 갖는 한계성 그리고 양곡도입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해(농산물가하락, 생산의욕저하, 농가의 상대적 빈곤화) 등의 문제는 자주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그리고 해방초기에 실시된 연고자 중심(친일 봉건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계층)의 敵産 공업시설의 불하정책과 더불어 미국원조를 주원료로 하는 이른바 三白산업에 대한 특혜제공으로 이른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의 재편성 및 편재현상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얘기되는 원시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실로 역설적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단 적산공업시설을 불하받은 사람들과 또 미국원조로 부터 특혜를 주로 받게 된 기업들이 과연 구시대의 지배계층에 한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차후 보다 정확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말기를 슬기롭게 연명해 온 민족자본가들의 역할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조에 의한 원자재를 원료로 하는 산업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동시대를 단순히 미국원조의존적 산업구조를 가진 시기로 평가해 온 견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국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볼때 우리는 일단 8·15해방을 계기로 일제유산과 구래의 반봉건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불철저하나마 일단 자유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나 적산불하 그리고 미국의 원조 등은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을만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거나 충분한 산업자본을 형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근대적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건설과정에 있어 반봉건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었던 해방초기의 개혁과정은 4·19혁명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31) 변형윤(1987)

2. 中央執權의 管理經濟期(1961-1992)

(1) 中央集權의 管理經濟의 定着期: 1962-1979

4·19에 의해 시도된 경제개발 노력은 불행하게도 5·16쿠데타에 의해 퇴장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필요성이나 방향설정에 관한 취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계승·시현되는 계기를 맞았다.

절대빈곤 및 빈곤의 악순환 타파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본목표를 둔 제1, 2차 계획의 특성은

첫째,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원 확보, 철도,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멘트, 비료, 정유등의 기간산업건설 등에 역점을 두어 성장에로분야를 타개하는 이른바 불균형성장방식을 채택하고

둘째, 공업화 위주(농업의 경시)의 성장을 추구하되

셋째, 수입대체 내지 수출주도 산업위주로 발전시키고

넷째,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외자도입에 의존하며

다섯째, 이상과 같은 성장전략은 정부가 주관하는 이른바 관주도형 경제정책을 표방하였다.

물론 내자동원 또한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부주도형 규제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결국 이 시기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체제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연 평균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진 정부는 보세가공단체에 머물렀던 경공업을 탈피하는 산업구조의 근대화 및 자립경제확립의 지속적 추진에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계속 답습하여 2차계획 기간중의 연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무한대에 가까웠던 저임양질의 노동력을 단순히 생산과정으로 흡수함으로써 성장을 이룩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시기가 1960년대 후반에는 사라지게 되어 1968-1969년에 이미 약 80개 차관기업이 도산하고 120여개 차관기업이 부실상태에 빠지게 된다.

1960년대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력을 동원하고 도입된 외자를 투입하는 즉, 유희상태의 생산요소를 동원하는 外延的成長(extensive growth)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2차계획 시기부터 이미 유희노동력은 고갈되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內延的成長(intensive growth)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

나라 수출주도형 공업화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농·공간의 격차가 극심해졌다. 따라서 3차 계획은 농어촌개발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도모(새마을 운동 시작)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멀리하고 단순히 주도산업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빈사상태에 있던 부실기업을 1972년에 8. 3조치를 통해 사채를 동결하고 특혜금융을 강화하여 기사회생시키게 되었다. 이는 오로지 유신헌법에 의해 탄생한 제4공화국의 초법적 강제력에 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리속에 시작된 제3차 계획은 1973-74년의 제1차 oil shock로 큰 위기를 맞았으나 뜻하지 않았던 중동 boom의 덕으로 3차계획기간중 9.7%라는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유신헌권은 이에 힘을 얻어 제4차 계획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8년에는 총투자의 약 79%가 중화학부문에 할애되어 치약이나 심지어 소주같은 생필품 부족현상까지 초래하였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이란 투자회임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판로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반면(특히 군수품의 경우) 당시 전세계는 이른바 stagflation현상이 만연되어 세계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화학 공업투자에 소요되는 투자규모가 엄청나 정부는 악성단기외채도 마다 않고 들여오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1978-79년간의 제2차 oil shock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4공화국은 1979년 10.26사건을 계기로 몰락하게 되었으며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제4차 계획기간 중의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내려앉고 말았다.

1960년대를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시기라 한다면 1970년대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수정을 선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균형을 유발하고 나아가서 계층간의 갈등이 극도로 증폭되는 위기를 초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 中央集權의 管理經濟의 衰退期: 1979-1987

유신헌제의 몰락속에서 탄생한 제5공화국에 이르러 비로서 경제개발계획은 늦게나마 기술집약형산업 구축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경험한 높은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과열투기 등이 초래한 병폐를 실감한 국민들의 안정추구심리, 그리고 이른바 3저현상등에 힘입어 세계4위를 기록한 외채의 누적등 암담한 여건을 탈피하고 점차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았다. 아

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제4공화국 몰락의 주범이 되었던 중화학공업부문으로 투자효과가 80년대에 들어서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5차계획 또한 수출주도산업을 중화학공업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였을뿐 기본적인 성장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구나 1981년 말부터 시작된 부실기업 처리가 역시 특혜금융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금융사고로 인해 1982년에는 은행민영화와 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연평균 성장률이 7.5%) 경제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증폭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정을 맞게 되었으며 결국은 민주화의 열거속에 제5공화국이 막을 내렸다.

결국 제5공화국은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가 건지될 수 밖에 없었던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이 갖는 한계성이 대형금융사고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가 하면 경제적 불균형과 불편등이 증폭되면서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전환으로 결국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쇠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은 6·29선언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된것이다.

(3) 中央集權的 管理經濟 沒落期 : 1987-1992

6차계획기에 들어서서 비로서 분배상의 형평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및 주택문제의 원천적 문제해결, 정부정책의 분권화와 민간주도형 체제로의 이행,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자유로운 노조활동 등의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서야 해방이후 일관해 온 중앙집권적 (관주도형) 경제정책원칙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 기간중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국제수지가 연3년간에 걸쳐 흑자를 기록하는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3당 통합 이후 경제사회는 심한 혼란기를 맞았고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기강과 윤리의 타락 등이 일반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현상은 실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고수해 온 경제운용방식, 즉 중앙집권적 관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와 모순이 드러나 이를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의 성격이

강하다.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적극적으로 지양되고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민간 주도형 자율경제를 지향하는 노력은 1993년에 들어선 김영삼정부 이후에야 비로서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계기를 맞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철저하게 자율적 시장기능에 근거하는 자생적 경쟁력과 경제력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따라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관리경제적 체질과 구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의 시기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分權的 管理經濟成立期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VI. 結 言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은 결국 최근 한국경제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성격규명작업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서양의 경제발전단계론을 주로 활용해 왔으며 유형별로는 Marxism 내지 Neomarxism에 근거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및 주변자본주의론과 그리고 Weber류의 분석에 근거하는 동양사회분석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대체적으로 한국경제를 문제점위주로 그 성격을 규명함으로서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조로 그쳤고 후자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동양사회가 오래동안 정체사회로 일관되어 온 사유와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서 패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본고는 위와 같은 기존의 분석시각들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직 철저한 논리적 검증이나 사료를 통한 방증을 거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발전과정을 적절히 고찰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방법론 시안이 근거하는 기본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과정은 인권의 신장과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둘째, 경제여건이나 제도 및 관습등에 따라 이행되는 발전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단선적인 이행과정에 의해 동서고금의 모든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인류복지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경제체제나 제도가 여타지역에 영향을 미칠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새로운 체제나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물론 새시대를 주도하는 체제를 영입하지 못한 지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대체로 새로운 체제나 제도는 기존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 있거나 지배력의 안정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출현하거나 이식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경제체제의 변화는 경제력에 근거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의 영향력과 주도적 지배계층의 지배방식에 근거하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정치, 종교 및 사상은 물론 경제제도 및 정책내용과의 연속 속에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명제를 근거로 하여 본고는 서양경제의 발전과정은 물론 동양경제의 전개과정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분석체제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도구 및 생산방법의 개선으로 인류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원시사회보다 향상된 복지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는 평등관계에 근거한 원시적 사회구성체를 정복에 의해 파괴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둘째, 정복에 성공한 지배계층은 생산도구 및 요소의 소유에 근거한 경제력 장악과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관계의 제도를 정착시키게 된다. 이렇게 정립된 지배관계의 성패는 생산력에 근거하는 생산력과 부의 배분상태에 달려있으며 이는 다시 생산요소의 소유방식과 경영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서구에서의 원시시대 → 고대노예제 → 봉건제 → 자본제 이행과정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는 대토지사유에서 중토지사유로 그리고 다시 소토지사유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생산의욕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상대적 다수 국민의 복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동양및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원시시대 → 국가적 노예제 → 국가적 농노적 → 지주제형태로 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역시 이러한 과정의 구분은

복지의 향상수준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그런데 동양에서의 경제발전이 특히 근세에 이르러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짐에 따라 결국은 자생적인 발전이 저해된 채 대부분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근세한국의 상대적 정체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한국에서의 주산업은 농업이며 전체 역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교역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정도에 불과하며 초기부터 정착된 중앙집권적 사회구성체의 지배력이 쉽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정복전쟁으로 정착된 지배력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전체국가제도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과거제를 통한 관료등용방식이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왕권의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중앙집권적 왕권유지에 기여한 또다른 요인으로 불교 및 유교 등과 같은 종교 및 사상에 근거하는 전통적 윤리 및 도덕 그리고 관습을 들 수 있으며 근세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신의 의지에 역행하는 일제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발전이 억압당한 채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국민복지가 극심하게 침해되는 시련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5년에 비록 독립은 되었으나 일제의 유산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인해 당초 의도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194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시기는 비록 외세와 구래의 지배계층으로 구성된 관료들의 개입으로 불철저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소유 및 생산관계에서 구봉건성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지만 농지개혁과 적산분할 및 외국의 원조를 통하여 근대시민국가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틀이 마련되고 또 1차적인 자본축적의 계기가 마련된 시기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연연이 이어온 한국경제는 해방초기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1962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성취하게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경제성장

은 수출주도형 산업을 주도로 하는 공업화를 추구하되 이에 필요한 자본은 외자를 통해 조달하며 이 모든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中央集權的 官理經濟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은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과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방대한 자본을 주도산업위주로 투입하는 이른바 불균형성장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도성장과 더불어 산업간 불균형, 정책운용을 둘러싼 부조리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안을 아울러 초래하였다. 따라서 10·26사태와 6·29선언을 거치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가 크게 도전을 받아 변모하기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본고에서 명명한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나 주변부자본주의론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의거한 한국경제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성을 보완코자 제시한 용어로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政權保持者에 의해 형성된 관료집단이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를 창출한 것은 마르크스론자들이 중요시하는 이른바 생산수단의 소유 자체만으로 야기되는 불평등보다는 재산에 대한 (형식적 소유가 아닌) 통제권의 행사방식이 오히려 근대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주요 불평등요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한국의 관료체제는 거의 절대적인 독점성을 갖는 막강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이 시대 전반에 걸쳐 관료집단은 재화및 용역의 사용 및 관리를 관장하는 권한은 물론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지위를 통하여 최근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계층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외형상으로는 독점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또 이러한 외형적 현상만을 보고 한국이 이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이는 있지만) 이들의 힘은 관료체제와의 연관속에서만 존속될 수 있는 지극히 한정적인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정권담당자가 체제의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부여한 특혜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혜속에 성장한 거대기업은 산업자본이 최고도로 발달한 단계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독점자본들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경제발전에 관한 분석틀과 그간의 한국경제가 전개되어 온

과정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때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관리경제체제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행을 배제하는 분권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이다. 작금의 난국은 바로 이러한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금까지 수행해 온 성장위주의 정책이나 안정만을 지향하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 및 정책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권화와 자율화 그리고 민영화로 대변되는 이른바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단순한 자본확충보다는 교육 및 각종 직업 훈련을 통한 고급인력 확충과 기술개발 그리고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노사관계 재정립과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정책논리의 도입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이후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질화되어 온 국민경제를 동질적인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남북간의 협력방안과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통일 문제를 고려한 장단기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분단시대를 청산함으로서 적게는 그간에 왜곡되어 온 산업구조와 이질화된 제도의 동질성 회복을, 그리고 크게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따른 동족간의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더 이상 한국인이 열강의 이해에 의해 희생당하는 비극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50년 가까이 북한에서 시도된 명령경제체제는 적게는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크게는 국민의 복지와 인권이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혼란에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김영호, “한국의 자본주의 논쟁”,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조용범외 공저), 대왕사, 1988, pp.457-478.
2. 김일근, “한국경제의 발전과 과제 : 유교문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학연구」 제34집(1986. 12), pp.273-301.

3.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1992, pp.359-392.
4. 박현채,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Ⅰ)”, 「창작과 비평」, 제157호, 1985. 10.
5. 박현채(편역), 「자본주의 발달사 연구서설」, 한길사, 1981.
6. 박준서, “집권제의 경제적 기초”, 「한국경제」 제9집(1981. 8), pp.1-16.
7. 변형운, “한국경제의 성장과 변천”, 「한국경제의 이해」(임원택외 공저), 1987, 비봉출판사, pp.31-56.
8. 안병직, “조선에 있어서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의 형성과 일본제국주의”, 「한국근대사회와 제국주의」(한국사연구회편), 삼지원, 1985.
9.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영」, 한국개발연구원, 1986.
10. 유광호, “막스베버와 근대자본주의이론”, 「막스베버와 동양사회」(유석춘 편), 나남, pp.495-527.
11. 유석춘, “베버의 동양사회 연구를 둘러싼 쟁점해제”,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1992, pp.393-410.
12. 유석춘·국민호, “베버의 지배유형과 제이콥스의 동양사회 유형”, 「막스베버와 동양사회」(유석춘 편), 나남, 1992, pp.311-334.
13. 이대근,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 제57호, 1985. 10.
14.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논란”, 「창작과 비평」, 1988년 겨울호, pp.397-424.
15. 이영훈, 「한국경제사」, 미출판 강의자료 (성대 경제학과).
16. 이종원, “정부의 역할과 경제윤리 :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제19권 제2호 (1993. 2), pp.31-49.
17. 이종원, “On the Welfare Aspects of Decentralization”, 「한국경제」 제17권 제1호(1989. 9), pp.219-242.
18. 이종원, “남북경제 교류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조정방안”, 「사회과학」 제32권 제1호 (1993. 4), pp.97-122.
19. 이종훈, “한국자본주의 형성의 특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pp.97-127.

20. 임원택, “한국경제분석의 방법론”, 「한국경제의 이해」(임원택외 공저), 1987, pp.3-30.
21. 임종철, “한국경제발전의 논리와 성격”, 「경제학연구」 제31집(1983. 12), pp.17-38.
22. 전성우, “막스베버의 근대사회론”,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1992, pp.17-72.
23. 조기준, “한국경제발전의 비교사적 이해”, 「경제학연구」 제31집 (1983. 12), pp.1-16.
24.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73.
25. 최단옥, “4·19혁명이전 한국경제의 역사적 성격”, 1988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1989. 2. 10)
26. 최단옥, “한국의 산업혁명기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 「인천대 논문집」, 제16집(1991), pp.445-459.
27. 최문환 외 3인 공저, 「경제사」, 박영사, 1960.
28. 최문환, 「근대사회사상사」, 백영사, 1953, pp.45-59.
29. 최문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삼영사, 1959, pp.211-230.
30. 홍성유,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정」,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31. 프랭크 파아컨 / 양승태 역, 「막스베버」, 학문과 사상사, 1985.
32. 프리드리히 텐부룩 / 차성환 편역, 「막스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문학과 지성사, 1990.
33. 芝原拓自 / 김홍식 · 이영훈 공역, 「소유와 생산양식의 역사이론」, 비봉출판사, 1990.
34. 大塚久雄 / 조용범 편역, 「사회과학의 방법과 인간론 : 막스 베버를 중심으로」, 풀빛, 1982.
35. 大塚久雄, 「歐洲經濟史」, 岩波書店, 1956, pp.129-141.